

아시아

戰後체제 벗어날 핵심카드... 아베, 도쿄戰犯재판 꺼내들다

도쿄=김수혜 특파원 도쿄=양지혜 특파원

입력 : 2015.11.13 03:00 | 수정 : 2015.12.01 07:24

[오늘의 세상]

日本 우익들, 역사 뒤집기 나서... "도쿄재판 효력 인정하나 얽매일 필요 없어"

- 청일전쟁 이후 역사 검증

美 등 국제사회 반발 의식해 '공부 모임' 형태로 시작

- 아베에겐 '가족의 역사'

외조부가 만주 침략한 전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신화 뉴시스

"도쿄재판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이 11일 낮 민방 BS니혼테레비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이자, 일본 우익의 '혼네(本音·본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다. "일본군위안부는 전시 중 합법이었다"고 한 적도 있고, "난징학살은 허구"라고 한 적도 있다. 도쿄재판 검증도 여러 해 전부터 부르짖었다. 2005년에도 방송에 나가서 "도조 히데키가

도쿄재판 때 '패전 책임은 지겠지만, 국제법상 잘못된 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옳은 말"이라고 했다. 도조는 침략전쟁을 총지휘한 죄로 사형당한 A급 전범(戰犯)이다.

자민당이 창당 60주년을 맞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직속으로 '전쟁 및 역사 인식 검증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청일전쟁부터 미군정(美軍政)까지 20세기 전반의 역사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12일 아사히·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청일전쟁·러일전쟁으로 한반도를 침탈한 뒤, 만주·동남아·태평양까지 침략하다가 미국이 제지하자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폭격했다. 그런 무모한 확전의 종착역이 도쿄재판과 미군정이지만, 일본 우익은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는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되레 반발해왔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본 우익은 '일본은 잘못된 게 없는데 전쟁에 져서 전범국가로 낙인찍혔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서 "도쿄재판 검증은 일본 근현대사 전체를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아베 총리가 집권 초기엔 아베노믹스 등을 내세우다가 이제 자신의 히든 어젠다(hidden agenda·진짜 목표)를 내보이며 핵심으로 다가서는 것"이라고 했다.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일본 -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의 시게미쓰 마모루(가운데) 외무대신이 1945년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호에 올라 미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일본이 항복한 이후 전범(戰犯)들에 대한 도쿄 전범재판이 열렸다. /미국 국립자료보관청

단 자민당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이번 위원회에서 정식 보고서를 내지는 않기로 했다. '공부 모임' 형태로 운용하고, 위원장도 이나다가 아닌, 온건파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 교수는 "검증은 하고 싶은데 외교 문제를 일으키긴 싫으니깐 이런 식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실제로 뭔가 국제질서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건 아니다"고 했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니가타현립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전후 질서를 인정한다'고 밝힌 데 불만을 가진 우익이 많다"면서 "그들을 달래면서, 미국의 오해도 사지 않도록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했다.

도쿄재판은 뉘른베르크재판과 함께 2차대전 전후 처리의 양 축이지만, 연합국이 일본과 독일을 다룬 방식은 전혀 달랐다. 독일에선 히틀러가 자살하고 나치 세력이 철저히 정치에서 배제됐다.

일본에선 달랐다. 냉전과 6·25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 탓이 컸다. 연합국은 히로히토 일왕을 면책했다. A급 전범 80명을 추리고, 그중 28명만 최종 기소했다.

근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와 일본의 시각 차이

국제사회의 시각		일본 우익의 시각
"일본은 과거의 만행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장 피에르 레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명예교수)	제 2차 세계대전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쟁범죄를 찬미하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다. 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재판의 결정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심보가 어처구니가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쿄 전범재판	"(도쿄재판은) 사후법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판결은 수용하지만, (역사를) 스스로 검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
"난징 대학살 참사는 무죄와 같은 증거가 산과 같이 존재하며 어떤 속임수나 꾀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난징대학살	"통상적인 전투행위는 있었지만, 난징에서의 (대)은 없었던 것 아니냐.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난징에서 열고 싶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

미국·영국·호주 등 11개국 판사가 그들을 심판했다. 판결 전에 죽거나 정신이상인 생긴 3명만 빼고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유일하게 '전원 무죄' 의견을 낸 인도 출신 라다비노드 팔 판사가 전후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다. 아베 총리는 2007년 인도 방문길에 팔 판사의 유족을 만나 "일본인은 팔 판사를 존경한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만주 침략을 주도한 A급 전범이면서도 전쟁 막바지에 확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한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가 그의 외할아버지였다.

문제는 일본 우익이 역사를 뒤집으려 할수록,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점이다. 도쿄재판 검증은 '승전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단죄하고 평화헌법을 강요했다'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분노할 내용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일본은 '아시아와의 관계는 우리 좋을 대로 밀어붙여도, 미국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중에 내부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면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본이 자기가 던진 부메랑에 자기가 맞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게 좋다"고 했다. 조세영 교수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일본이 나쁘니까 한국 편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역사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현안이기도 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